

“DMZ, 제발 손대지 마요”

행안부 ‘한국판 산티아고길’ 조성 계획에 시민들 ‘냉담’ “미확인 지뢰지대·자연보호구역에 관광 목적 길이 웬 말”

“DMZ는 65년 동안 사람이 들어 가지 않아 지켜진 곳인데 개발하면 파괴될 수밖에 없잖아요” “통일 전부터 DMZ에 토목공사를 할 셈인가요”.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비무장 지대(DMZ) 주변에 조성하기로 한 ‘한국판 산티아고길’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논란이 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6일 DMZ와 인근 접경 지역에 한국판 산티아고길인 ‘DMZ, 통일을 여는 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286억원을 들여 강화에서 고성까지 456km의 한반도 횡단 도보 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행안부 측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해 2500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스페인의 가톨릭 순례길인 산티아고길과 비교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행정안전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계정에 20일 올라온 홍보 트윗에는 공공기관 게시글로는 이례적으로 300개가 넘는 답글이 달리고 1500여개의 리트윗이

찍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반대 글들이 올라왔다. 내용은 ‘DMZ의 자연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이다. 종교색이 짙은 산티아고길과 DMZ를 연결 짓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 관계자는 “DMZ가 아닌 접경지역에서 기존에 있는 관광자원들을 잇는 수준이고, 새로 길을 내도 사람이 다니는 오솔길 정도”라면서 “예산도 토목사업을 할 정도가 안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앞으로 국방부·환경부·산림청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문제들을 걸러내며 노선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계획안을 살펴보면 순례길은 민간인통제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편 접경지역을 주로 지나고, 민통선 위쪽을 지나가는 곳은 양구군의 두타연 정도로만 제시됐다. DMZ 주변을 바로 지나가는 길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문제는 있다. 녹색연합에선 지난

10월 경기 연천군, 강원 철원·양구군 등을 직접 조사해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접경지역에도 ‘미확인 지뢰지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민통선이 개발 압력에 밀려 북상하면서 통제에서 풀려난 곳곳에 아직도 지뢰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강원도 산림의 90%는 희귀한 식물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개발과 출입이 제한된 자연보호구역에 관광 목적의 길을 내 예외 사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재철 녹색연합전문위원은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되돌리기 어려운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유관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부작용을 검토한 뒤에 발표해도 늦지 않은데 서둘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에) DMZ라는 이름이 붙으면 (DMZ에) 직접 손대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는 DMZ가 개발이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한반도 면적의 1%도 되지 않는 DMZ의 자연만이라도 그냥 놔두라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개발 논의가 더욱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道, 분단 현장이자 통일 길목... DMZ 대성동은 미래의 근대문화유산

에필로그2 남북교류 전진기지, 대성동-기정동 상호 개방하자

1945년 한국은 해방과 동시에 분단을 맞이했다. 지금도 분단은 계속되고 있고, 한국 근대역사가 남긴 과제를 우리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한국 근대사가 경기도에 부여한 과제를 완수하는 길이다

분단의 현장 통일 길목 경기도

경기도는 분단의 현장이다. 그러나 남북이 평화와 화해 길로 가는 지금 경기도는 통일의 길목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 땅은 이처럼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분단을 상징하고 중요와 대립의 땅임과 동시에 화해와 협력, 평화를 상징하는 땅이다.

이 양면성을 지니는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적군묘지다. 적군묘지의 정식 명칭은 '북한군 중국군 묘지'이다. 적군묘지는 제네바 협약 규정 '적대행위의 결과로서 사망한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자의 유해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망자들의 묘지는 존중되고, 그러한 사망자들의 묘지는 존중되고 유지되고 표시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해 1996년 5월 국방부가 전국에 산재한 북한군 유해 727구와 중국군 유해 329구를 모아 조성했다. 그 후에도 국방부 유해발굴단이 국군 유해를 발굴하다가 수습된 북한군과 중국군 유해를 계속 이곳에 안치했기에 묘지는 확장했다.

묘지에는 6·25전쟁 당시 전사한 군인만이 아니라 전쟁 이후 남한에 침투한 북한 공작원들도 묻혀있다. 대부분의 묘지가 '무명인'이라고 묘비에 표시되는데 일부 묘지에는 죽은 자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북한군 11 상위 김시흥 1·21사태 무장공비 1996. 6. 14.' '북한군 30 소위 권호신 1·21사태 무장공비 1996. 6. 14.' '오비 주인공은 1968년 청와대를 공격하려다 미수 그친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의 묘이다. 1987년 김현희와 함께 KAL 858기를 폭파하고 자살한 김승일, 1998년 남해안에 침투했던 공작원, 1998년 동해안 반잠수정 침투 사건 당시 자폭한 공작원의 시신 등도 묻혀있다. 적군 묘지가 조성된 이후 오랜 기간 이 묘지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제네바 협약 규정에 의거해 묘지를 조성해 관리했지만 묘지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중요와 대립의 상징이던 적군 묘지가 우정의 증표가 되다

2010년대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오고, DMZ 인근의 안보관광지가 관심을 끌면서 적군묘지가 관심의 대상이 됐다. 묘지의 존재가 언론에 보도되고 여기에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중국인민지원군의 유해가 안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인 유족들이 찾기 시작했다. 그동안 묘지를 관리하지 않고 흰색 포말로만 묘비를 세웠던 묘지를 찾는 중국인 참배객이 늘자 국방부는 비석을 세우는 등 묘지 단장을 하기 시작했다.

2010년 추석에 50대 후반의 중국 중년 여성이 적군묘지를 참배했다. 이 여성은 유족자이다. 어머니 배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6·25전쟁에 참전했고 전사했다고 한다. 그 여인은 죽기 전에 아버지 묘소에 의뢰하고 싶다고 물어 물어 적군 묘지를 찾은 것이다. 이 여인은 수퍼에 들러 재수를 사고 어머니 무명인이라 낱말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적군묘지에 묻힌 중국 군인은 신원을 알 수 없기에 묘지 표지석에 모두 '무명인'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 여인이 아버지 묘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던 갈망은 어느 정도 해소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동시에 인도주의 입장에서 적군이었던 중국인민지원군 유해를 묘지에 안치해 관리해준 한국에 감사했을 것이다.

적군묘지를 찾는 중국인 방문객이 계속 늘어나고 중국인의 관심이 증대되자, 2014년 중국을 방문한 대통령이 중국군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2014년에 437구, 2015년 68구, 2016년에 367구가 송환됐다. 유해를 돌려받은 중국 정부와 중국인은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중요와 대립의 상징이었던 적군 묘지가 이제 협력을 두렵게 하고 우정을 나누는 증표로 바뀐 것이다.

'적군 묘지'를 '북한군 묘지'라 불러야

지난 12월 3일 적군묘지 관리를 경기도가 국방부로부터 이관 받았다. 경기도는 분단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적군 묘지를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적군묘지의 정식 명칭은 '북한군 중국군 묘지'이다. 그러나 이 묘역에 안치돼 있던 중국인민지원군 유해가 모두 송환됐기에 '북한군 묘지'가 정확한 표현이다. 국방부가 이 묘지를 관리할 때는 '적군 묘지'였

다. 이 명칭에는 분단의식이 강하게 배어있다. 경기도가 관리하면서부터 적군묘지를 '북한군 묘지'라고 쓰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 분노와 증오를 가져다주는 분단의 상징이 새로운 태도로 접근하면서 화해의 우정,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대성동은 미래의 근대문화유산이다

분단의 현장이 통일의 길목으로 변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가 경기도에 있으니, DMZ 내 대성동 마을이다. 마을에서 400m 떨어진 곳에 군사분계선이 있고 그 건너에 북한의 기정동 마을이 있다. 대성동과 기정동은 미래 통일이 됐을 때 마을 그 자체를 보존해 에코뮤지엄으로 만들어도 좋을 정도로 분단시대를 상징하는 마을이자, 미래의 대표적인 근대문화유산이다.

대성동은 DMZ 내에 있기에 외부와 완전히 고립돼 후방 출입을 할 수 없었다. 의식주는 마을 사람들이 자급을 했고, 가끔씩 후방으로 출입하는 대성동 주민들로부터 자량을 이용해 생필품을 구하는 것이 고작일 정도로 어렵게 살았다.

6·25 전쟁 중에는 마을에 한국군 1사단 협보부대인 HJD가 주둔하면서 대북 첩보수집 활동을 했다. 1952년부터는 특수부대인 미 해병대 소속

파주시 적성면 '북한군 중국군 묘지' 시민민군 유해 송환- 북한군만 남아 중요와 대립-화해와 협력 상징의 땅

대성동 마을, 군사분계선 400m 거리 북측 기정동 마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 기형적으로 높은 태극기-인공기 계양대 남북각 격렬했던 체제선전·경쟁 상징한 시대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기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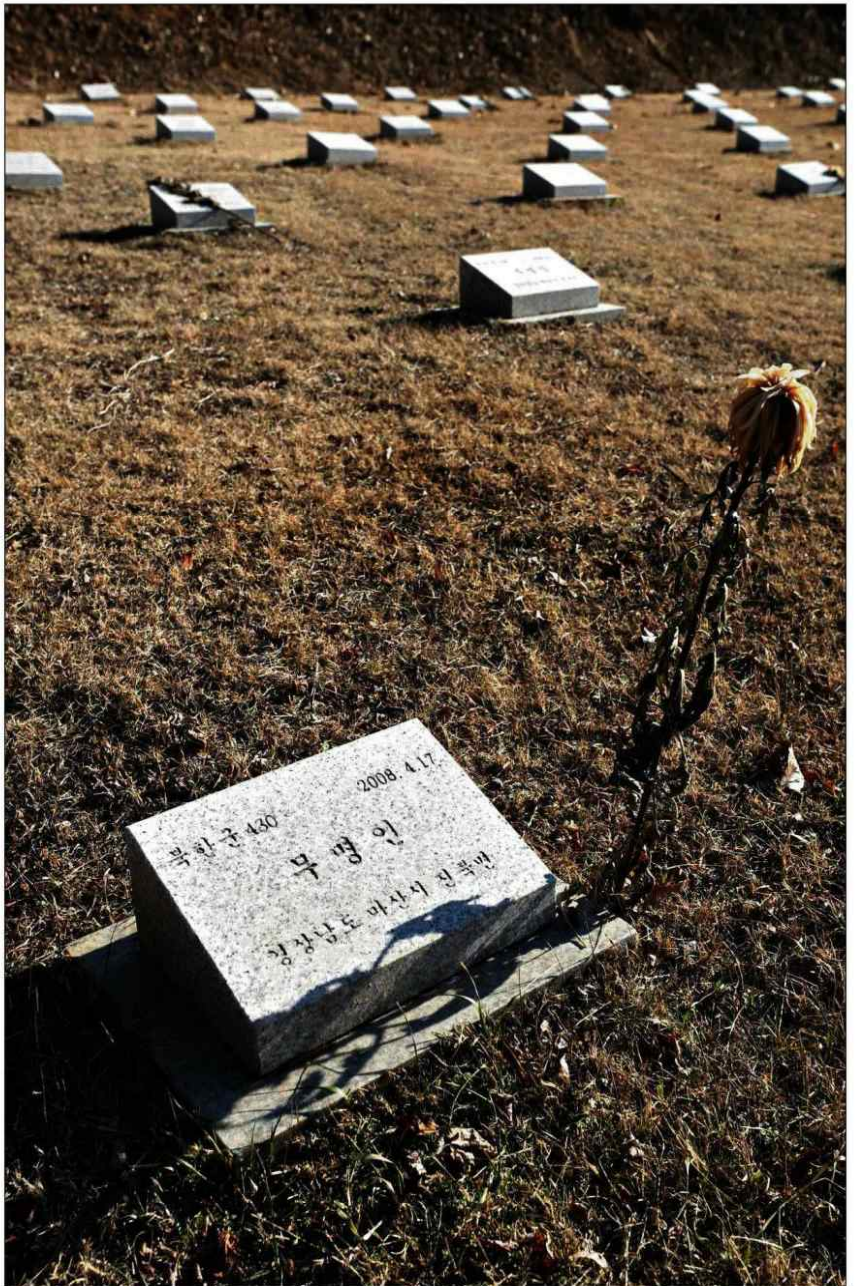
두 마을 사이 철조망 없이 몇몇만 흘러 남북 합의만 있으면 마을 통합도 가능

8240 헬로부대가 주둔했다. 밤에는 대성동 주민들과 군인들과 같이 보초를 섰다. 대성동은 평범한 마을이 아니라 북한과 철매하게 대치 상태에 있는 전방 전초기지 같은 마을이었다. 주민들의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군인처럼 군사 활동도 했다.

남과 북이 철매하게 대립하던 이 시기에 대성동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1958년 12월 8일 대성동 주민 이대성이 한병 복장을 한 이들에게 끌려가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은 한국 헌병이 살해했다고 했고, 한국은 북한 군인이 한국군 헌병 복장을 해서 이대성을 납치해서 살해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주민이 월북하는 사건이 있었고, HID 요원으로 활약한 주민을 강제로 납북하려는 사건도 있었다.

1959년 정부가 대성동 주민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성동 주민의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다. 정부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마주 보이는 곳에 북의 기정동 마을이 있기에 대북 선전 효과를 위해서이다. 그 결과 대성동 주민들은 다른 농촌마을을 주민들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다.

대성동과 기정동은 남북 간의 체제 선전 장소였다. 그래서 두 마을은 기형적인 조형물이 하나씩 있었다. 높이 100m에 이르는 대성동 태극기 계양대와 165m 높이의 기정동 인공기 계양대가 그것이다. 남북이 경쟁적으로 높이 올린 결과이다. 대성동과 기정동 마을의 계양대는 통일 이후에도 철거하지 말고 보존해야 한다. 한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기념물이기 때문이다. 대성동 마을에서 불과 800m 거리를 두고 북한의 기정동 마을이 있다. 한반도 내 남과 북 사이에는 어느 곳이나 폭 4km의 거대한 비무장지대가 가로막고 있다. 지뢰밭이 깔려 있고 철조망도 겹겹이 쳐져 있다. 그러나 대성동과 기정동 사이에는 철조망도 쳐져 있지 않고 그 사이에는 조그만 냇물만이 흐르고 있다. 남북이 합의만 보면 두 마을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는 데는 아무런



12일 파주시 적성면 적군(敵軍) 묘지에서 추모객이 놓고 간 꽃이 보이고 있다. 적군묘지는 국방부가 1998년 제네바 협약에 따라 조성한 묘역으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국군, 한국전쟁 이후 북한 공작원 등의 유해가 안치된 곳이다. 이렇듯 주요 관리 주체가 군에서 경기도로 이관됐으며 도는 평화의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파주시 점령지역에서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마주 보고 있다.



대성동 자유의 마을 입구 모습.

어려움이 없다.

북한에 대성동과 기정동 마을 상호 개방을 제안해보자

남북이 대립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되고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성동에 대한 개발형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어떨까. 경기도가 나서서 북한에 대성동과 기정동 마을을 상호 개방에 교류를 제안해보자.

대성동과 기정동 두 마을을 하나의 마을로 만들거나 남북 주민이 오가며 물건을 사고팔고 일지라도 공유하며 공동생활을 해보자.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던 함께 살아야 할 텐데 마을 단위의 시도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두 마을은 남북의 다른 마을과 격리돼 있는 비무장지대 내에 있기에 시범사업을 펼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성동과 기정동 두 마을에 남북문화예술인들이 교류하며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건립하자. 며칠 전 북파된 DMZ 내 GP 전해물로 평화를 상징하는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일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경기도는 분단의 현장이면서 통일의 길목이다. 분단의 현장인 경기도를 통일의 길목,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경기도 사람이 할 일이다. 또 이것이 한국 근대사가 경기도민에게 던져준 과제이다. 강간장 경기학회화-경기도 문화재위원-편집-황제환기자